

34956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층 TEL. 042)331-0092
FAX. 042-252-6976 www.cham.or.kr

수 신 /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 목 / 누구를 위한 국제대회 유치인가 - 대전광역시는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계획을 철회하라 -

날 짜 / 2021년 3월 23일

누구를 위한 국제대회 유치인가
- 대전광역시는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계획을 철회하라 -

2030년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에 실패한 충청권 4개 시·도는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위한 신청서를 3월 중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추진단을 구성했고, 상반기 내 공동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내년까지 정부승인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이다.

하지만 국제대회 유치가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은 알고 있다.

국제 스포츠대회의 예정된 적자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은 국제 스포츠대회의 허와 실을 명백히 밝힌 사례다. 국제대회 유치 시기마다 정치인과 스포츠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기대효과’가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려줬기 때문이다.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발간한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인천아시안게임에는 각종 경기장 건립·보수비 1조 7224억 원과 운영비 4832억 원 등 2조 2056억 원이 소요됐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조 27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또한 현재까지도 경기장 운영적자는 매년 1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장밋빛으로 이야기했던 경제효과는 인천광역시와 인천시민들을 빗더미에 올린 채 끝났다.

인천아시안게임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열린 평창 동계 올림픽도 평창조직위원회는 흑자라고 발표했지만 그 내면에는 12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수입으로 계산했고, 사회 인프라 투자인 고속철도 건설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약 1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봤다. 물론 많은 스포츠 관계자들과 경제

학자들이 말하는 “기대효과”는 단순히 계산하기 어렵다. 경기장 건설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은 대규모 건설사들의 이익과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만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관광효과 역시 실질적으로는 경기 관계자들을 제외하면 경기 후 평년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내수증진도 대회시기에 일부 업종의 일시 호황 외에 다른 업종의 경제효과는 입증된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기대효과와 예정된 적자 사이에서 대전시는 더 신중해야 한다.

다시 한번 대전시는 국제대회 유치에 앞서 현안의 우선 순위를 검토해야 한다. 바로 직전에 인천 아시안게임과 평창동계올림픽을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대전시는 서남부스포츠타운을 2011년도부터 조성하려 하고 있지만 타당성 조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사업의 마무리는 2029년으로나 예정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주 경기장으로 사용하기조차 어렵다. 또, 신축 야구장 건설을 앞두고 있어 지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국제대회 이후 발생한 경기장 운영적자 대책과 활용계획 역시 없다.

국제 스포츠 대회가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타당한 절차를 통해 기존 국제대회 평가와 대전시 세비 지출 계획 및 이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먼저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 이런 명분도 대책도 없는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제 국제대회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2021년 3월 23일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문현웅 이진희

